

의안번호	제 8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4. 4. 3. (제 6 차)	

홍국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4. 4. 3.

1. 의결주문

홍국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11.4.~2021.11.19. 기간 중 실시한 홍국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 홍국화재해상보험(주)(이하 '회사')가 통신판매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총 295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회사에 과징금 79백만원을 부과하고, 보험설계사 47명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

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 회사가 2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징금 104백만원과 과태료 50.4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 ☐ 회사가 113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였는데도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기 납입 보험료 17백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징금 8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舊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6호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3항,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6호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2023.10.5.) 심의필

마. 2024년도 제6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4.3.28.) 심의필

<별지>

홍국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홍국화재해상보험(주)

○ 과징금 191백만원 및 과태료 50.4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홍국화재해상보험(주)(이하 '회사')는 2019.10.1.~2020.5.22.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홍국화재 간편치매보험(20.04)(간편심사 일반형)' 등 8종*의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 (무)홍국화재착한가격간편치매보험(1910)(간편심사일반형/간편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일반심사 일반형/일반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 (무)홍국화재간편치매보험(20.04)(간편심사일반형/간편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일반심사일반형/일반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95건(수입보험료 213백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신질환이나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등

□ 동 건은 「舊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음

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8.5.21.~2021.9.3. 기간 중 ‘무배당 일석이조(一石二鳥) 건강 보험(1804)’ 등 24건(수입보험료 41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전화 통화에 응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우편 등에 의한 대체적 안내 미실시

□ 동 건은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였음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무배당 흥국화재 간편치매보험(20.04)(간편심사일반형)’ 등 31종*의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 (무)흥국화재유병자보험(1901)(유병자형_10년갱신형/20년갱신형)(2종), (무)흥국화재유병자보험(1904)(유병자형_20년갱신형)(2종), (무)흥국화재유병자보험(1909)(유병자형_20년갱신형)(2종), (무)흥국화재착한가격간편치매보험(1904)(간편심사일반형/간편심사해지환급금미지급형) 등

- 회사는 2018.3.22. ~ 2021.6.23. 기간 중 총 113건(17백만원)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기 납입 보험료 17백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였음

(붙임 1)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② (생략)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8. (생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 ~ 11.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 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제209조(과태료)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7. ~ 17.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舊 보험업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09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7. ~ 17.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② (생 략)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바.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사.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 3. (생 략)

④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舊 보험업법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서“보험료, 보장범위, 보
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7.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 ⑦ (생 략)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사목에 따라 보
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외의 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 변액보험계약

나. 저축성보험계약

다. 장기보장성보험계약

□ 舊 보험업감독규정[2024.1.31.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 ⑦ (생 략)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사목에 따라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 가. 변액보험계약
 - 나. 저축성보험계약
 - 다. 장기보장성보험계약
 2. 청약 후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설명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 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 나.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 다. 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 부분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 마. ~자. (생략)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 가. 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 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
 - 다.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⑨ ~ ⑪ (생략)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①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4호 다목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 가. 전화 등 음성통화
 - 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2. ~ 4. (생략)
 5. 보험회사는 1일당 2회 이상 최소 3영업일간 제1항 가목에 의한 통화를 시도하고도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 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 ⑤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 (생략)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금융지주회사법」제64조,「은행법」제65조의3,「여신전문금융업법」제5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보험업법」제196조제1항 및 제2항,「자본시장법」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금융지주회사법」제64조,「은행법」제65조의3,「여신전문금융업법」제58조제4항,「보험업법」제196조제1항 및 제2항,「자본시장법」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1항 본

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58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전자금융거래법」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세부평가 기준표 >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 중(2점)
-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 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 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4) (생략)
- 나.~다. (생략)

6. 부과과징금의 결정

-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4) (생략)
- 나.~바. (생략)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 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바. (생 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나. (생략)

5. 과태료 부과 면제

(1)~(7) (생략)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6호)

1. (생략)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삭제

마.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6.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삭제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구분	고의	과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10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대한 경우 - 매우 중대하거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차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5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생략)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 범위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기 타

- (1)~(3) (생략)

-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9. (생략)

□ 회사의 기초서류

< '무배당 홍국화재 간편치매보험(20.04)(간편심사일반형)' 사업방법서 별지 >

21. 기타

가. 간편심사형 상품의 적용(1형(간편심사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형(간편심사형 일반형)에 해당)

1) 간편심사형 상품이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함

2) ~ 5) (생략)

6) 회사는 계약자가 간편심사형 상품의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표준체에 해당하는 일반심사형 상품에 청약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함.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위 6)에 의하여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 간편심사형 상품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함

8) 회사는 계약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9) 위 8)에 의하여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줌

나. ~ 다. (생략)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홍국화재해상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4.00.00.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기관주의 ■ 과징금 191백만원, 과태료 50.4백만원
임·직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 자율처리 의뢰

4. 제재대상사실

가.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홍국화재해상보험(주)(이하 ‘회사’)는 2019.10.1.~2020.5.22.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 등 8종의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9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등

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8.5.21.~2021.9.3. 기간 중 ㉡ 등 2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전화 통화에 응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우편 등에 의한 대체적 안내 미실시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31종의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2018.3.22.~2021.6.23. 기간 중 총 113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기 납입 보험료 17백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 의무 등) 제1항,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6호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 의무 등) 제3항,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6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보험검사2국
연 락 처	02-2100-2962	02-3145-7679